

제78회 KISTEP 수요포럼

주 제 : 2018 이슈와 트렌드: 세계경제와 한국경제

담당자 : 박지현 부연구위원(T. 02-589-2275)

포럼 종합 요약

2018. 1. 17

1. 개요

- 일 시 : 2018년 1월 17일(수) 10:00~12:00
- 장 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- 발표자 : 이근 (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)
- 주 제 : 2018 이슈와 트렌드: 세계경제와 한국경제
- 토론자 : (산) 김형주(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),
(학) 손종칠(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),
(연) 조현승(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연구본부장)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~10:05	개회사	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05~10:10	발표자 소개	(사회)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10~10:50 (40분)	주제 발표	이근 서울대학교 교수
10:50~11:30 (40분)	패널소개 및 지정 토론	(좌장)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지정 토론자 3인(김형주 연구위원, 손종칠 교수, 조현승 본부장)
11:30~12:00 (30분)	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발표 주요 내용

□ 2017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키워드

- 작년 주요 핵심키워드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, 트럼프 당선 이후 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성장 저하
-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고, 그 외 국내 경제에 특수한 키워드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

□ 2018년 한국경제를 보는 핵심 키워드

-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의 비교라는 중장기 전망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단기 전망임

□ (중장기 전망) 한국경제가 소득주도의 수요측 부양 정책만을 기반으로 하면 일본의 장기불황 전철을 밟을 가능성 증대

- 일본의 장기불황 시대와 현재의 한국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인구추세가 매우 비슷하나, '90년 일본은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이 적자였으나 '10년 한국은 재정흑자였다는 차이점 존재
- 일본은 장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증대했고,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남
- 한국이 공급측 대응이 아닌 소득주도의 수요측 부양 정책만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면 일본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 증대

□ (단기 전망)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패키지의 원활한 작동여부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

- 해외소비,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신종 낙수효과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우려
-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낮은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산업경쟁력 저하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혁신주도성장 정책 필요

□ (대외 전망) 미국, 일본 경제가 재부상 vs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감속

-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, '16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역전됨('01년 32%, '11년 21.5%, '16년 25%)
- 미국 GDP 대비 중국의 GDP 비율은 60%대로 '16년 이후 증가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함('00년 10%, '14년 60%, '15년 62.2%, '16년 60.4%)
- 일본과 독일의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수준은 하락세로 일본은 '92년 이후 하락하였으며, 독일은 '03년 슈뢰더총리 하르츠개혁 이후 회복세
-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 상승과 '89년 이후 28년 만에 무디스의 중국 신용 강등, 중국의 기업부채는 160%로 한국(100%)과 미국(70%) 보다 높음
- 중국내 무역의존도는 '0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내수는 확대되고 있어 '09년부터 분배가 호전되고 있음

□ (한국 경제)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호조세이나, 근간이 되는 지표는 취약

- '17년 11월 기준,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, 산업생산, 소비 판매, 설비투자가 동반 증가한 반면, 제조업 평균가동율이 71.8%로 추락,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바닥수준,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%
-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에서 제조업, 대기업 중심의 산업쏠림현상은 심화

□ 향후 경제발전 방향: '인간 중심의 경제'를 비전으로 경제발전을 도모

- 한국 경제의 위기의 본질은 낮은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산업경쟁력 저하로 주력기간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미래성장동력 부재,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부족,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이 원인
- 중국과 4차 산업혁명은 둘 다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중국을 넘어서고 4차 산업혁명을 끌어안는 산업전략이 필요, 특히 중소벤처기업에게 기회임
- 과거 고 경제성장, 고 인구성장, 다 일자리 생성 목표에서 미래에는 중 경제성장, 저 인구성장, 소수 고부가가치 일자리 생성으로 목표 전환 필요

3. 주요 토론 내용

□ 한국경제에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은 글로벌화에 기인

- 과거에는 선도 산업/기업의 성장이 가치사슬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이어졌지만, 이제 '가치사슬' 자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감에 따라 낙수효과를 누리는 대상과 범위 역시 함께 변화한 것임
- 이와 더불어, 낙수효과를 가둬두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 가지 노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(외환, 세제, 통상)
- 미국 중심의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력 등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경제 위상을 고려할 경우 금리를 미국보다 오랜 기간 더 낮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
-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 내수 경기 또한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금리 인상 속도 및 경로를 찾아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임

□ 새 정부가 최근 들어 혁신주도 성장으로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은 긍정적

- 소득주도 성장은 전 정권의 '빚내서 집사라'의 구호에 압축되어 있는 (가계)부채 증가를 통해 (주택)자산을 늘리는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읽혀짐
- 슈퍼마켓 식의 혁신주도 성장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지 그 이후에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
- 그렇다면 슈퍼마켓 식의 혁신주도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? 즉, 서비스산업 저생산성 혁파,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, 중소벤처-대기업의 선순환 등에 대해 어디에서부터 매듭을 풀 수 있는가?
 - 기업의 역동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획기적인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진(사회적 대타협; 변양균『경제철학의 전환』)
 - 기업도 해고 요건이 완화됨; 신산업 진출 및 사업구조 개편이 용이;

중소기업 혜택에 안주하는 지원제도 혁신;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/대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등

□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업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

- 기업들은 2018년 세계경제가 지난해의 안정적(moderate) 성장 패턴과 달리 빠른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‘전형적 확장(typical expansion)’ 국면을 따를까 우려함.
 - 그동안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해온 물가, 임금, 금리, 환율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높아질 경우 의사결정 보수화 불가피
- 경제적 성과는 ‘역량’과 ‘환경’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임.
 - 끊임없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대내외 환경을 적절히 예측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능력 중요
- 경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책임을 과감히 줄이고, 정부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착시, 즉 과도한 기대를 해소해야 함.
 - 현재와 같은 무한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의 역할 및 개입 범위와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(ex. 사회적 안전망, 공공성 등)

□ 한국 사회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

- 당시 일본의 내수 비중(85.2%, 1995년)이 한국(53.4%, 2015년)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차이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
 - 고령화 등에 따른 내수 침체 충격,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출 규모 등이 한일 양국에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
 - 또한,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도 내수 비중이 컸던 기업들에 비해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장기 침체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
- 청년실업률 추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일본을 20년 후 행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향후 7년간 정점을 찍은 후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사회구조 변화 대응 및 생산성·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경제 인프라 구축

- 제조업 위주의 세제·금융·임지 등 정부지원 정책을 개편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, 제조업 서비스화, 제조-서비스 융복합을 통한 성장동력과 경쟁 원천 확보 필요
-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및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
- 스마트규제의 관점에서 부문별로 시장창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인증제도 및 관련법령 구축이 필요하며,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제도 공백 최소화
-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저해하는 기존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조정 기능 강화 등 신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

□ 벤처 육성 활성화 및 산업별 전략 차별화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필요

- 2000년대 초반에 벤처 투자 붐이 일어났으나, 정부에서 벤처 인증을 만들면서 한해 200개 창업이 20개로 줄어버림
-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, 소규모 벤처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
- 중국사례를 보면, 신종 스타트업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
 -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으며, 2~3년 만에 선두 주자가 많이 바뀌는 구조임에도 미국의 구글, 아마존과 같은 기업에 대응하는 IT기업을 만들어서 한국보다 분발하고 있음
 -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당분간 6.5%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, 리스크는 시진핑 이후 정치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, 경제 자체의 리스크는 거의 없음
- 아직 한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과 분야를 중심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, 산업별 양국의 기술격차 및 시장개방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